

### 편의점·자판기서 골프장·신재생 에너지 개발까지

# “공기업 나가신다, 민간 비켜라” 사라진 고용 65만명

#### 파이터치연구원

30대 공기업 자산 효율화편  
생산유발효과 166조원 달해

‘코레일유통 편의점·자판기, 한국관광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 골프장, 해양환경공단 일반예선, 한국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이 영위하고있는 사업에 전방위로 손을 뻗치며 오히려 시장 경제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진출한 상당수 서비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경쟁관계에 있어 경기 침체,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이들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들이 손 안대고 코를 풀면서 불공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공공부문의 시

####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

구분	민간경합 사업
정부	예금·보험
시장형 공기업	일몰주유소
준시장형 기업	무연탄 생산·판매, 주택분양보증, 민자도로 유지관리, 금·메달, 금융자동차·인식기기 제조, 화장품 정품인증, 임대주택 운영, 일반예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골프장, 의료 서비스, 정부광고 대행, 부실자산 인수·정리, 주택연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가스검사·안전점검, 골프장, 공공축량,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 신재생에너지 개발, 승강기 검사, 우체국택배, 우체국소핑(꽃배달포함)
기타 공공기관	임대주택 운영, 테마파크, 민간주차장 관리, 자판기, 편의점, 건물목 경비, 선형기술조사, 교육사업, 홀수시영TV, 건설공사 감리
지방 공기업	골프장, 골프연습장, 목욕탕

[자료=공정거래위원회(2017), 국회예산정책처(2017), 김영신(2017), 김영훈·이수영(2016), 나유성(2016), 박진 외(2014), 성승제 외(2016), 국제뉴스(2017.10.16), 조선비즈(2017.7.27), 한국일보(2015.4.1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각종 홈페이지, 현장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작성]

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에서 30대 공기업 자산이 민간기업만큼 효율화된다면 16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1조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64만5000명의 추가 고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

관 등은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등 민간경합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합’이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세금

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민간경합 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들면서 도리어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에서 축출시키는 것은 정당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해 축적된 자산, 기술, 정보, 네트워크, 철도역, 항만 등이 있는데 이를 근거해 기반이 없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꼬집었다.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원한 금액은 총 65조4000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정부 총 예산 386조4000억원의 16.9%에 달한다. 그러면서도 총 자산회전율은 민간 72.1%, 공공 42%, 총 자본순이익률은 민간 9.6%, 공공 1.2% 등으로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성은 민간 대비 크게 낮은 모습이다.

이처럼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는 공공기관이 경합사업에 계속 손을 댈 경우 고객 서비스 부실→시장 축소 및 정체→투자 및 혁신 감소→성장 및 고용 축소→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 고용 위축 등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계 연구원의 지적이다. 김 원장은 “유통업, 레저업, 서비스업 등 공공성이 약한 사업들과 편의점, 자판기, 골프장 등 민간이 운영해도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없는 사업은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원은 ▲사업의 공공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 공정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존·신규 사업에 적용해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들의 이같은 진출 사례에 따른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가칭) ‘공공·민간 경쟁불공정성 신고센터’ 설치, 운영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이 영위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 경제 전반에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부문 대신 민간기업들이 나서면 투자와 혁신이 증가돼 결국 성장 및 고용 증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선순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민생·경제 협치 기대... 재정역할 절실”

####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좋은 정책·제도 적기에 시행해야  
늦어지면 피해는 국민에 돌아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난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0여만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민 호응이 높아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김승호 기자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자발적 결정”

조희연 시교육감, 청원글에 반박  
“정상적 진행... 문제 되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재학생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청원글에 반박하는 답변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3일 ‘시민·학생 청원’ 제1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제기된 청원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에 대해 “대성고 일반고 전환은 학교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시작됐다”며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행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학생 청원은 지난달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청원게시판을 개설한 이후 나온 것으로, 조 교육감이 청원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 청원은 1만명 이상, 학생 청원은 1000명 이상 동의하면 교육감이 답변하기로 했다. 대성고 학생 청원은 이날 오전 1185명 동의를 받고 있다.

은평구 대성고 학생들은 이번 청원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설명회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교육청도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행정을 벌여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 추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한용수 기자 hys@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성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해, 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재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사고 재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인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고 전환 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5년간 예산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고 전환 이후)후배들도 자사고 때보다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 “그동안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화, 입시명문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으로 우리 고교교육을 왜곡시켜왔다”며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대학서열과 학벌사회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답변이 미진하다면 학생들과의 토론회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한용수 기자 hys@

## ‘번복’ 드루킹 증언, 법정증거 인정될까

#### 6일 업무방해 혐의 공판 준비기일

특검 수사에서 번복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력과 증명력을 모두 인정받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6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심리에 앞서 열리는 준비기일은 특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으로

쟁점을 정리한다. 향후 심리 계획도 세운다. 이날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다.

형사32부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 사표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건도 맡고 있어, 이날 사건 병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그의 측근 도모 변호사의 선다이 총영사직 제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본다.

김 지사는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

진화 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도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드루킹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본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올해 2월 총 7만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118만6602개에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8833만3570회 보냈다고 판단했다. /이병종 기자 jake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인 대성고 재학생들이 올린 청원글에 반박하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